

G-Welfare Weekly Report
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2016년 대한민국 복지,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
01 복지 전달체계 개편 : 읍면동 복지허브화

- 2016년 초 정부는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193개 제도를 소개하였고, 지난 한 해 동안 복지분야에서의 변화를 주요 사업을 통해 점검
- 정부는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,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금년 3월 전국 33개 선도지역에서 '복지허브화' 를 우선실시, 6월에 959개로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 추진
 - 읍면동 주민센터를 '행정복지센터'로 명칭변경하고 '맞춤형복지팀(3명 인원 추가배치)' 신설하고, '사각지대 발굴', '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', '통합사례관리', '민간자원 연계' 등의 서비스 제공
 - 방문상담 56만 건, 사각지대 발굴 41만 건*의 실적을 도출, 2017년에는 2,100개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가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산
-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일환으로 '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' 구성 및 운영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역할 부여하였으나 청탁금지법(제11조)의 적용범위에 포함, 활동에 차질 우려
 - 실적위주의 평가로 인해 복지허브화 성과에 대한 불신, 기존의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민간기관과의 역할 분담 미비 등의 문제 해결 필요
- 경기도는 221개소 허브화 실시하였으며 맞춤형복지팀은 121개 설치(기본형 76개+권역형45개)
 -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'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원단(TFT)'을 공동 구성, 31개 읍면동에 대한 1, 2차에 걸친 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실시결과 광역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상 수상
 - "허브화를 추진하면서 사각지대 발굴 시 각 읍면동에서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어,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 개입에 대한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"고 담당자들은 인식**

*2016.11.23.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
**2016년 경기도 모니터링 결과

02 제3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첫 해

- 2016년은 제3차 저출산·고령사회 5개년 계획 중 1차년도, 고용·교육·주거 등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 중심으로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***
 - 저출산 대책 81개, 고령사회 대책 98개 등 총 189개 과제, 예산은 5년 동안 약35.3조 원 투입
 -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핵심과제 점검·평가시스템 도입,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,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'분석평가과'를 인구정책실 하위에 설치
- 금년 상반기(1월~5월)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2005년보다 약 7천명 적은 수준(18만2천명)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 성과는 미지수
 - 정책초점이 자녀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양육지원 정책에 집중했기 때문에, 아이를 낳기 위한 선제조건인 결혼을 하게 만드는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평가
- 경기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TF를 2014년에 설치하고,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.5명을 목표로 설정
 - 보육정책보다는 일자리, 부동산 등 경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, 고용률 15% 상승(61.4%→70.6%), 지역내 총생산 20% 상승, 혼인율 10% 상승(6건→6.6건)을 위한 추진과제 제시

***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주간복지동향 24호 및 61호 참조

03 발달장애인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

- 2016년 장애인분야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관련 서비스 확대, 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설치, 주간활동 시범사업 등 장애인관련 사업이 획기적으로 확대
 - 발달장애인지원법이 2014년 5월 제정,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고, 2016년 12월까지 광역권 단위로 지역발달장애인센터 17개소가 설치
 -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가 심각한 발달장애인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기존 거점병원 2곳을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신규 지정
 - 별도의 진료 코디네이터가 발달장애인의 예약부터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며, 치료 효과의 극대화 및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진료부서 간 협진이 가능
-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새로운 서비스로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1급~3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
 - 2016년 현재 전국 10개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, 전면 시행을 준비 중
- 경기도는 2016년 12월 22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(수원시 오목천동 누림센터 3층)를 개소하여 개인별지원계획수립, 권익옹호 업무, 공공후견지원 등의 사업 추진
 - 경기도 발달장애인(지적장애 38,203명, 자폐성장애 5,360명 / 총 43,563명)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
 - 개인별지원계획수립: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, 직업재활 서비스, 문화·복지 서비스 등 지원
 - 권익옹호 업무: 발달장애인의 피해발생시 신고접수와 상담을 돕고 사법절차 등 지원
 - 공공후견지원: 재판 시 보조인 참석, 주거계약, 은행업무 등 법적 조력을 위한 공공후견인지원 업무 수행 등

04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

-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꾸준히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6년은 민간기업 일자리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
 -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참여노인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의와 참여노인의 보수 증대를 위한 민간기업 노인고용활성화 추진 중
- 정부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, 현재까지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*
 - ('04) 2.5만개 → ('13) 24만개 → ('15) 33.7만개 →('16) 38.7만개 → ('17) 43.7만개(목표)
 - 이러한 정부지원 일자리 이외에 민간기업의 노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일자리 박람회 개최, 취업교육센터 확충 ('15. 6개소→'16. 8개소), 노인고용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
 -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('16년 37백만명 → '20년 36.6백만명 → '30년 33백만명)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본격 진입 등을 대비하여 노인이 보다 높은 보수를 받으실 수 있는 민간기업 일자리를 추가 발굴
 - 공익활동의 활동비 동결(20만원)에 따른 시간단축과 참여노인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경기도를 포함 전국적으로 논의 확대
-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총 159개소이며, 경기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참여노인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의와 시장형일자리 안정된 생산성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·교육 실시

*보건복지부 (2016), 보도자료

2. 2017년 복지제도, 이렇게 달라진다

01 주요 내용

- 29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자 「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 책자를 발간
 - 책자는 내년에 신설·변경되는 242가지 제도를 11개 분야·31개 부처별로 구분하여 정리
- 제시된 242건 중 보건·복지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총 40건에 해당하며, 지난해 안내서와 비교했을 때 복지는 줄고 고용노동 분야는 확대
 - 복지분야에서 주요한 제도적 변화로는 복지 전달체계 개편(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),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, 노인학대범죄 처벌 강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,
 - 고용분야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전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,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본격 추진(목표 5만 명), 중장년(40세 이상)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대 등이 있음

〈표〉 2017년 분야별 보건복지제도 신규·변경사항

복 지	1	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	가 족 아 동 청 소 년	8	내일배움카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
	2	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및 명단공표		9	출산휴가 급여상한액 인상(135만→150만)
	3	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		10	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강화
	4	희망키움통장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		11	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
	5	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기준 완화		1	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화
	6	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		2	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
	7	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		3	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
	8	저소득 농어가구 주택정비 지원 확대		1	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체계 마련
	9	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		2	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확대
	10	공공임대주택 입주·재계약 기준 완화		3	우유급식 무상지원 고등학교로 확대
보 건	1	임신부·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	법 죄 피 해	1	장애인·고령자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
	2	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		2	성폭력·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
	3	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		3	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운영
고 용 노 동	1	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	세 제	4	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
	2	최저임금 6,470원으로 인상		1	근로장려금 지원 확대
	3	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적용 추진		2	출산·입양 세액공제 확대
	4	중장년 생애경력설계 기회 확충		3	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상
	5	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		4	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
	6	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		5	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완화
	7	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		6	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

- (저소득)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29%에서 30%으로, 최저보장수준(4인가구 기준)을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약 1.7% 상향
 - 주거급여(국토교통부)의 경우 선정기준은 '16년 대비 1.7%(4인가구 기준 192만원), 지급기준은 '16년 대비 2.54% 상향조정
 -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이 '16년 100만원(단독가구 기준)에서 119만원*으로 상향되고,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율을 기존 50%에서 90%로 대폭 상향
- (노인) 노인학대 관리 및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
 -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·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, 노인학대 범피전력자는 관련기관으로의 취업이 10년간 제한
 - 또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새로 도입해 치매노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계획
- (고용) 장애인·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의무도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
 -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.0%에서 내년 3.2%로 상향조정되고, 민간기업도 현재 2.7%에서 내년 2.9%로 상향 조정
 -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.0%를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고용토록 한 제도의 효력도 오는 '18년까지 연장

*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.4만원으로 상향

02

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전국 시도별 지역소득 현황

통계청 「2015년 지역소득」 자료를 토대로 전국 16개 시도*의 지역소득 실태를 비교

-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.8%로 나타났으며, 시·도별로는 제주(4.5%)와 충북(4.2%)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
 - 그러나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, 강원, 전남에 불과하여,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하락함(3.3%→2.8%)
 - 경기도는 3.6%로 전국 16개 시·도 중 4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. 그러나 이는 전년대비 1.8%p 하락한 수치로, 건설업을 제외한 농림어업(-10.1%p), 제조업(-4.7%p), 서비스업(-1.9%p)이 전년대비 부진하였기 때문
- 2015년 우리나라 지역총소득은 1,57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81조원(5.4%) 증가
 - 시·도별로는 서울이 390조원, 경기가 377조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, 제주는 16조원으로 가장 작았음. 반면 증감율은 전남(15.3%), 울산(10.9%), 제주(10.3%)가 높고, 강원(2.3%), 대전(3.2%), 서울(3.5%)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
 - 서울의 경우 지역총소득 규모 자체는 가장 크지만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(1.6%→3.5%)인 반면, 제주는 이와 반대로 지역총소득 규모 자체는 작지만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(5.9%→10.4%)
- 1인당 개인소득은 16개 시·도 중 울산(2,001만원), 서울(1,997만원), 부산(1,720만원) 등 3개 지역에서 전국 평균(1,717만원)보다 높게 나타남

*세종시는 기초자료 미비로 제외. 충남 및 충북에 포함하여 집계

〈표〉 전국 시도별 지역소득 주요지표

	경제성장률	지역총소득 (증감율)	1인당 개인소득		경제성장률	지역총소득 (증감율)	1인당 개인소득
전국	2.8	1,571(▲5.4)	1,717	경기	3.6	377(▲5.4)	1,689
서울	3.5	390(▲3.5)	1,997	강원	3.0	34(▲2.3)	1,502
부산	3.1	88(▲4.3)	1,720	충북	4.2	44(▲5.6)	1,575
대구	2.7	59(▲5.7)	1,661	충남	3.4	82(▲4.3)	1,631
인천	3.5	78(▲5.7)	1,625	전북	0	42(▲4.8)	1,594
광주	2.0	36(▲5.5)	1,588	전남	3.7	56(▲15.3)	1,492
대전	2.0	38(▲3.2)	1,690	경북	1.1	79(▲5.1)	1,556
울산	0.2	57(▲10.9)	2,001	경남	0.3	94(▲8.4)	1,629
				제주	4.5	16(▲10.3)	1,649

(단위: %, 조원, 만원)

2.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시·군 정책토론회

지역	일시 및 장소	지역	일시 및 장소
시흥시	• 일시 : 2017.01.10.(화) 10:00-12:00 • 장소 : 미정	용인시	• 일시 : 2017.01.17.(화) 14:00-16:00 • 장소 : 용인시청 비전홀(3층)
평택시	• 일시 : 2017.01.12.(목) 10:00-12:00 • 장소 : 미정	안성시	• 일시 : 2017.01.18.(수) 10:00-12:00 • 장소 : 미정
오산시	• 일시 : 2017.01.12.(목) 14:00-16:00 • 장소 : 오산시청 물향기실(2층)	화성시	• 일시 : 2017.01.18.(수) 14:00-16:00 • 장소 : 미정
군포시	• 일시 : 2017.01.13.(금) 14:00-16:00 • 장소 : 군포시여성회관 대회의실(2층)	남양주시	• 일시 : 2017.01.20.(금) 10:00-12:00 • 장소 :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(3층)
수원시	• 일시 : 2017.01.17.(화) 10:00-12:00 • 장소 : 경기복지재단 교육장(3층)		

03 FACT CHECK

기본소득,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의 대안인가?

- 조기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기본소득, 특히 그 도화선으로 청년수당 관련 논의가 다시 점화
- 기본소득은 본래 전 국민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정액현금을 지급*하는, 이른바 '전 국민 수당제도' 모형이었으나, 국가여건이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시
 - 밀튼 프리드먼**은 근로유인을 높이는 부의 소득세를 주장한 반면, 이안 고프는 일시적 기본소득을, 앳킨슨***은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형태의 참여수당을 제안
- 한국에서의 기본소득은 공통적으로 '기존 사회보장+기본소득' 모형을 전제로 논의되지만, 대상자, 급여수준, 재원,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입장차이가 존재
 - 지난 21일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제안했으며, 소요재원은 180조로 추정
 - 이어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지 않은 대상을 제외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그 재원이 최소 20조가 필요하다고 주장****
- 양극화 문제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할 혁신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갈구가 높아졌으나, 그 해답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숙고 필요
 - 공공부조·기초연금 등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모두 폐지하고 이념적 형태의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거센 반대여론이 예상되며,
 - 실제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한국형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설득력을 가지는지, 그리고 기본소득이 실제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

*필리페 반 빠레이스(2010), 분배의 재구성

**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. 소득세를 비율에 따라 삭감하는 '부의 소득세' 주장(1962년)

***앳킨슨 지수를 개발한 런던정경대 교수로, 「불평등을 넘어」(2015)에서 참여수당 주장

****이동수당, 청년수당, 실업부조, 상병수당 등 대상자별/육구별 수당을 제공, 18~64세 취업자는 적용 제외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2015 지역소득 통계*



- '15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총소득은 1,571조원이며, 서울(390조)과 경기(377조)가 압도적 규모
 - 반면 전년대비 증감률은 전남(15.3%), 울산(10.9%), 제주(10.3%)에서 높고, 서울(3.5%). 경기(5.4%)는 증감률이 낮은 편임
- 지난 6년간('10년~'15년)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총소득은 1,266조원에서 1,571조원으로 24.1% 증가한데 비해 경기도는 30.9%가 증가(288조원 → 377조원)
- 경기도의 지역총소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, 경기도 복지예산의 비중은 지난 '14년을 기점으로 1.4%p 감소

*2015년 잠정소득 기준